

## 제 목

## 2024년도 일본정부 예산요구액 주요 내용

□ (주요 내용) 일본의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\*요구액은 114.4조엔으로 지난해 예산(106.0조엔\*\*)보다 8.4조엔 증가

\* 일본정부 예산은 9월경 각부처의 예산요구액을 종합한 후 정부 및 여당 심의를 거쳐 '23.12월 정부(안)을 결정하고 '24.3월까지 '24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 의결

\*\* 방위력 강화자금 편입액 3.4조엔, 코로나19 및 유가·물가 급등 대책 예비비 4.0조엔, 우크라이나 정세 긴급대응 예비비 1.0조엔 제외 기준

○ 예산요구액 기준으로는 2022년도(111.7조엔)를 상회하는 역대 최대 수준

○ 부처별로는 사회보장비 증가 등에 따른 후생노동성 예산요구액이 33.7조엔으로 '23년 예산(33.1조엔) 대비 0.6조엔 증가하였으며, 그밖에 방위성 예산요구액 7.7조엔(+0.9조엔), 국토교통성 7.2조엔(+1.2조엔) 등

○ 재무성은 장기금리 상승 등을 가정\*하여 국채 상환 및 이자지급 등에 사용되는 국채비를 '23년(25.3조엔)보다 2.9조엔 늘어난 28.1조엔 요구

\* '23년 1.1% → '24년 1.5%

□ (평가) 언론 등은 정부의 중요정책 추진 목표 등을 위한 특별기준(特別枠) 요구\*, 요구액을 정하지 않는 사항 요구\*\*(事項要求) 등이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되고 있어 재정증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(일본경제신문, 마이니치신문, NHK 등)

\* 각 부처의 재량적 경비 삭감분의 3배까지 '새로운 자본주의' 등 중요정책 추진 목표에 부합할 경우 특별기준으로 예산을 요구

\*\* 8월까지 예산요구액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예산액을 명시하지 않고 항목만 포함

○ '24년도 특별기준 요구액은 4.2조엔으로 경비삭감을 전략적 예산배분으로 연결하려는 목적이 있으나, 중요 정책과 상관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수혜적 정책이 많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상황

○ 고물가 대응, 저출산 대책, 방위비 관련 등 폭넓은 정부 정책이 사항요구 예산으로 인정되고 매년 사항요구 항목이 늘어나는 추세

— '24년도 예산요구액 중 사항요구 항목은 최소 80개(일본경제신문)

— 다음연도 사항요구 사업이 금년도 보정예산에 계상되는 사례도 증가(NHK)

○ 한편 수급갭 (+) 전환('23.2분기 +0.4%, '19.3분기 이후 처음),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등을 감안하여 현재의 '디플레이션 하의 재정·금융정책 논리'를 재점검할 단계라는 주장도 제기(쿠마노 다이이치생명 수석 이코노미스트, 일본경제신문)